

#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용 석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명 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완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국가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로 ‘통합사회’의 개념을 제시하고, 통합사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합사회’는 다양한 이질적 구성요소의 포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수준을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의 차원으로 지표화하여 통합사회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31개 회원국(2010년 1월말 기준)과 G20 국가 중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포함해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사회 발전 속도 및 국가 간 격차는 경제성장 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국제사회 기여’ 부문의 빠른 발전 속도와 국가 간 격차의 두드러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간의 비교 분석 결과, 경제발전속도는 OECD가 빠르나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OECD 비회원국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국가군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증가하나 통합사회 발전 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추세 분석을 통해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이 39개국 전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과 통합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균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합사회의 형성은 미래 선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이어나가야 한다.

주제어: 통합사회,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지표연구, 한국

\* 본 연구는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통합사회지표(2010)’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위해 조연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섭 교수, 한상범 교수, 강상인 박사, 정명은 박사, 박나라 연구원, 박찬열 연구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연구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논문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다.

\*\* 교신저자

## I. 서 론

최근 들어 국가의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으로 고려되던 복지, 교육, 건강 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배제, 위험, 갈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표출되는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갈등이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유럽사회통합위원회, OECD 등의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들은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으며 내재되어 있던 사회적 갈등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표출됨에 따라 이념·지역·세대 등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갈등예방 및 해결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되어 온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 사회적 보호 등의 관련 개념을 재정립하여 경제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로 ‘통합사회’의 개념을 제시하고, 통합사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을 시계열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사회’는 다양한 이질적 구성요소의 포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수준을 통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통합사회’ 지수는 국가발전 수준을 경제지표 위주로 측정하던 관점을 보완하고 최근 표면화되고 있는 갈등사회·위험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OECD 31개 회원국(2010년 1월 말 기준)과 G20 국가 중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포함해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

1. OECD 회원국이면서 G20인 국가(11개국):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Korea, Mexico, Turkey, United Kingdom, USA, OECD 회원국이면서

2008년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선진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선진국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통합사회를 기준으로 한국의 위상을 평가함으로써 국가발전 정책의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관련한 국제기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III장에서는 통합사회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구성한다. 또한 구성된 지수체계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특성 및 측정방법, 지표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통합사회 발전 수준과 추세를 살펴본다. 마지막 V장에서는 한국의 통합사회 발전 수준 및 발전 속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기존 문헌 연구

본 장에서는 통합사회와 관련하여 사회통합 및 그 관련 개념<sup>2</sup>들로부터 개

---

G20이 아닌 국가(20개국): Austria, Belgium,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OECD회원국이 아니면서 G20인 국가(8개국): Argentin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2. 사회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기반하여 발전한 개념인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넓은 의미에서는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대명, 2009). 사회학 전통의 연구에 기반하여 발전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통합사회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자발적 유기적 통합 외에 강제적 혹은 획일적 통합이라는 부정적인 암시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차이와 논쟁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나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더 많은 지면이 요구되므로 생략한다.

〈표 1〉 유럽연합의 사회적 포섭과 사회적 보호 지표

구분	주요 영역	정의와 구분
1	빈곤위험 a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소득비중 - 연령: 0~17, 18~64, 65세 이상
	빈곤위험 b	빈곤선 이하 구성원의 균등화된 중위소득과 기준선(중위소득 60%)의 차이. 빈곤선대비 비율로 표현 - 연령: 0~17, 18~64, 65세 이상
2	소득불평등	소득배율(S80/S20): 상위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3	건강불평등	출생, 45세, 65세의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살 것으로 기대하는 연수(가칭 disability가 없는 기대수명) - 성별
4	교육결과와 인적자본형성	중등학교만 마쳤고 4주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18~24세의 인구비율 - 성별
5	노동시장 접근성	직업이 없는 가구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비율 - 연령별, 성별
6	사회보호기계의 재정적 안정성	공적사회지출의 연령별 투입, 지출의 GDP 대비 수준, GDP 대비 변화 추세치
7	연금적정성 a	0~64 대비 65세 이상 연령의 균등화된 소득대비율
	연금적정성 b	50~59세 대비 64~74세의 연금비율(각종 사회적 급여 제외)
8	보건에 대한 접근불평등	논의 중
9	전년도 고령 빈곤 위험	전년도 물가 계산 대비 빈곤위험 가정 이하 사람들의 소득 비중, 각 연도 물가상승반영
10	노령층 고용	동 연령의 전체 인구 대비 55~59세와 60~64세 고용된 사람 비율 - 성별
11	근로빈곤	피고용자로 분류된 개인이면서 빈곤위험에 있는 사람들 - 성별
12	노동시장참여	15~64세 인구 중 실업과 고용자 비율 - 연령과 성별
13	지역차이	가중된 국가 평균으로 나눈 지역고용의 분산 - 연령 15~64세
14	건강증진	미정

자료: European Communities(2009).

발된 총괄지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요소들을 중요한 발전지표로 보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구분	영역	지표
1차적 지표 (Primary Indicators)	소득	1. 빈곤율 2. 소득분포 3. 빈곤지속성 4. 상대적 빈곤 격차
	지역적 결속	5. 지역(NUTS 2)차원의 고용률
	실직	6. 장기실직 7. 무직 가구원 수
	교육	8. 조기 교육기회 상실
	수명	9. 평균 기대 수명
	건강	10. 소득수준별 자각 건강 상태
2차적 지표 (Secondary Indicators)	빈곤	1. 빈곤 산포(dispersion) 2. 특정 시점 빈곤율 변화 3. 소득이전 전의 빈곤율 4. 지속 빈곤율
	소득분배	5. 지니계수
	실직	6. 장기 실직자 비율 7. 초창기 실직자 비율
	교육	8. 저학력 비율

주: 1) NUTS는 유럽의 지역을 나누는 단위.  
자료: Bardone and Stanton(2003) Annex.

먼저 OECD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의 제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지표로부터 사회통합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지표의 구성은 ‘사회적 압력-현상-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의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사망률, 이민, 난민, 고용, 노령기 소득, 사회지출, 기대수명, 보건, 자살, 범죄, 투표 등 매우 다양하다. OECD가 발간하는 *Society at a Glance* 보고서에서도 사회통합 관련 지표는 ‘사회적 현황’과 ‘사회적 대응’으로 구분되어 있다.

EU는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는 회원국이 사회적 보호와 통합 전략을 보고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 실업, 근로, 교육, 건강 등 5개 평가영역별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Robnson and Oppenheim(1998)의 사회적 배제 지표

영역	지표
소득	1. 빈곤(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가구) 추이 2. 10분위 소득점유 추이 3. 인종집단별 5분위 소득점유 추이 4. 소득지원(공공부조) 수혜 기간
실업	1. 장기실직률(2년 이상) 추이 2. 실업, 비고용(non-employment), 비근로(workless) 가구 추이 3. 비근로 가구(workless households)의 인적구성 및 비율
교육	1. GCSE 평점 추이 2. 성별, 인종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3. 16세의 주요 소속별, GCSE 평점별 취득 비율 4. 근로연령에 있는 사람의 최고 교육자격 취득률 추이
건강	1. 사망률 2. 신생아 평균체중과 저체중 신생아 비율

자료: Robnson & Oppenheim(1998), 문진영(2004) 재인용.

〈표 4〉 Bradshaw et al.(1999)의 사회적 배제 지표

사회적 배제 분류	구성요소	측정 지표
수입/자원	저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사회적 필수품의 결여	2~3개의 품목이 부족할 때
	주관적 빈곤	주관적으로 선정한 필수 생활비와 실제 수입을 비교
노동시장	실직 상태	퇴직과 학생을 제외한 실직상태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의 결여(전기, 수도, 교통수단, 물품구매, 금융서비스 등)	3개 이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에 비참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 중 3개 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외	매일 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부재
	지원	조사에 제시된 가사 및 정서적 지원(7개 상당)에서 4가지 지원의 부재
	이탈	지난 3년간 모든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선거만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사회적 활동의 제한 (confinement)	여러 개인적 여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 어둠 등 공포로 인한 제한

자료: Bradshaw et al.(1999), 문진영(2004) 참고.

〈표 5〉 문진영(2008)의 사회적 권리 지표

영역	차원	지표구성	
소득 보장 (20)	빈곤	빈곤율(상대)/빈곤율(절대)/빈곤갭/장기빈곤율/근로빈곤율	
	소득불평등	5분위분배율/지니계수	
	공적연금 공공부조	공적연금수혜율/공적연금가입율/공공부조수혜율	
	기타 소득보장	고용보험가입율/산재보험가입율/산전후휴가이용율/상병급여수혜율/육아휴직급여이용율/폐질·장해급여수혜율	
	재분배 효과	빈곤감소율/빈곤갭감소율/지니계수개선율/5분위배율개선율	
건강 (20)	최선의 의료 서비스	건강보장 사각지대 인구비율/진보본인부담율/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소아예방접종율/의료급여대상자본인부담율/활동의사수/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자궁경부암검진율/국민의료비 중 공의료비 비율/이주민/이주노동자 의료시설 확보율	
	안전작업 생활환경	식품미보장율/상수도보급율	
	건강수준	출생시 기대수명/총사망율/영아사망율/주요질환에 의한 사망률/저체중아출생/자가보고 건강수준/조기사망	
주거 (12)	주택의 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주거비 부담정도/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비율	
	점유의 안정성	홈리스 수/강제퇴거가구수/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쪽방거주 인구수/비자발적 이주가구수	
	주거권 실현과정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보장/주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제공 제도 여부/지자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노동 (20)	노동시장	전체고용	고용율/비경제활동인구비율/여성고용율/25~34세 여성고용율/여성비경합인구비율/25~34세 여성비경합비율/혼인, 임신, 출산전후 탈락률
		경합인구	실업률/취업률/비임금근로자비중/성별청년층실업율/자영업과무급가족종사비율
		비정규인구	한시적근로자비율/전체비정규직비율/저임금근로자비율 임시, 일용, 호출근로, 시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노사관계	전체노조조직률/고용형태별 조직률/단협적용율/고용형태별단협적용율	
교육 (13)	중등교육	중등교육탈락률/연령별탈락률/계층간사교육비 비중	
	평생교육	평생학급참여비율/저소득층참여율/고용형태별 비율/성별 비율	
	소득격차	연령집단별 소득격차/학력별 소득격차/수도권과 지방대 졸업생간 소득격차/성별 소득격차/고용형태별 소득격차/학력별 소득격차	

주: ( ) 안의 숫자는 지표구성 수를 나타냄.  
 자료: 문진영(2008) 재구성.

한편, 국외학자에 의한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내세워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탈과 배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Robinson and Oppenheim(1998)의 연구(〈표 3〉)에서는 사회적 배제 지표의 영역을 소득,

〈표 6〉 노대명 외(2009)의 사회통합 지표

영역	사회통합 핵심지수	사회통합 총괄지수
소득	-빈곤율 -5분위 소득배율	빈곤율/5분위 소득배율/지니계수(√)
고용	-실업률 -임시일용직 비율	고용률(√)/실업률/임시일용직 비율
금융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대출 금리/가계대출 연체율/신용불량자 비율(√)
교육	-교육비 지출비중	교육비 지출비중/학력별 임금격차/중도탈락율(√)
건강	-의료비 과부담가구율	의료소외계층 비율/주요질환별 사망률(√)/의료비 과부담가구율
주거	-주거비 과부담가구율	5분위 재산배율(√)/주택전세가격 지수/주거비 과부담가구율
가족/연계망		이혼율/자살률(√)/사회적 연계망(√)

주: 총괄지표 중 처리된 지표(√)는 현재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표.  
자료: 노대명 외(2009).

실업, 교육, 건강으로 두었으며 Bradshaw et al.(1999)의 연구(〈표 4〉)에서는 수입 및 자원, 노동시장,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 따라 지표 구성요소를 달리 두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통합’으로 개념화하여 관련 지표가 개발되어 오고 있다. 문진영(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지표개발 작업의 결과물로 총 5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유럽의 사회적 배제 지표와 유사하게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로 하위 차원을 두고 제1~3수준 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노대명 외(2009)의 연구(〈표 6〉)에서는 사회통합지표 선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였다. 소득, 고용, 금융, 교육, 건강, 주거, 가족/연계망 등으로 영역을 나누고 이를 다시 사회통합 핵심지수와 사회통합 총괄지수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분기 단위로 데이터 생성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후자는 연간 단위로 데이터 생성 및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지수로 구성되었다.

최근 들어 부상하는 이러한 사회통합 논의는 기존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일원적으로 다뤄져 왔던 통합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탈냉전 시



대를 맞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균열의 봉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적 통합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분배 중심으로 통합의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혹은 사회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배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통합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최근 진행되는 사회통합 논의는 이러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가, 사회 내부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종합적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EU(2004)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fair and equal access to resources),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존엄성 부여(individual and collective dignity), 개인의 자율성 보장(autonomy of the individual), 공동체에 대한 참여(participation in community life)를 지적하면서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역설한 바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최근 부상하는 사회통합 논의에서는 통합의 주요 가치를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에 두고 있다. EU(2004)에서 정의한 ‘사회통합’은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할 사회적 역량”을 의미하며 ‘통합적 사회’란 “민주적 수단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상조적 공동체”를 지칭한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위협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보호, 경제적 소외 등에 초점을 두고 지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각 지표들은 개인의 객관적 상태를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되지만 그 지표구성에 있어서는 개인의 객관적 상태를 진단하다 보니 개인들 간의 관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태도, 소속감, 공동체 수준 등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과 복지 수준이 곧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지만 사실 ‘개인의 자율성과 복지 수준이 곧 사회통

합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셋째, 측정영역은 주로 경제, 복지, 교육, 건강 수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 격차의 심화, 복지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개인의 자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곧 사회통합이라고 동일시되는 관점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적 의미의 자본과 복지를 넘어 공동체 건설, 통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다.

넷째, 사회통합은 개념상으로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측정지표 구성을 보면 현대사회의 다원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특징이 다양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신뢰수준이 사회통합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갈등이 주로 경제적 격차, 계층 간 격차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통합의 범위를 주로 국내적 수준에 두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막론하고 사회통합 공동체의 범위를 한 국가의 국내적 수준, 국민적 결집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개인 및 공동체는 지구촌 사회와 직접 교류하며 개별 국가 역시 세계 사회(world society)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및 공동체의 범위를 국제사회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통합이 정책적인 화두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급속히 심화되는 세계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대다수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의 관심은 세계화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 있어 국민국가(nation-states) 간 경계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이른바 지구촌(global society)이 형성되는 거시적 흐름 그 자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그 이면에 국가 간 통합의 반대급부로서 지역 간, 남녀 간, 인종 간, 계층 간 격차 심화가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세계사회의 표면적인 통합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내부적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추진 방안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통합의 실체를 진단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와 정책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별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보편화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9a, b).

### III. 통합사회: 개념, 지표 구성 및 데이터

#### 1. 통합사회의 개념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의제로서 부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개념과 그 구성요건에 대한 합의는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세계 각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사회가 처한 사회통합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포괄적인 ‘사회통합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노대명·이태진 외, 2009).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이 개별화된 지표의 형태로 남아있고, 영역별 지수(index)나 전체 사회통합 지수로 발전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노대명 외, 2009). 그러므로 한 사회의 사회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총괄지표(composite index)를 생성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 할 수 된다.

본 연구는 ‘국가경제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모습, 목표, 방향, 이상향’의 의미로 ‘통합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합사회 개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갈등사회, 위협사회라는 개념에 대비되는 긍정적인 사회모습의 의미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개념상으로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통합의 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다.

통합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통합(사회적 포섭)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통합사회는 첫째, 자율성과 형평성에 더하여 다양성, 관용, 신뢰, 참여 등의 수준이 높은 사회이다. 둘째, 개인 간의 관계,

〈표 7〉 '통합사회' 의 개념과 특징

명칭	사회통합 (사회적 포섭)	통합사회
주요 가치	자율성, 형평성	자율성, 형평성, 다양성, 관용, 신뢰, 참여 등
관심대상	개인 자체의 객관적 상태	개인 자체의 객관적 상태, 개인들 간의 관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태도, 소속감, 공동체 수준
주된 측정영역	경제, 복지, 교육, 건강	경제적 자율성, 형평적 복지, 사회구성원 다양성, 관용성, 신뢰, 참여, 협력 등
다원화된 사회 반영 정도	반영 수준 낮음	반영 수준 높음
'사회'의 범위	국내적 수준	국내적 수준 + 국제사회
'통합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사회에 대한 개인의 태도, 소속감 등 사회공동체적 특징을 관심의 대상으로 둔다. 셋째, 통합사회의 역량은 경제적 자원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자본의 달성 수준을 포함한다. 넷째, 다원화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다섯째, 통합사회는 사회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적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로의 통합과 노력을 다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통합사회의 특징은 유럽사회통합위원회(2004)에서 제시한 바인 사회·경제·문화·정치적 통합 및 지속가능성, 공동체 참여, 사회적 역량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민적 결집력을 통해 가능하다.

완성 또는 성숙된 통합사회는 오늘날 또 다른 의미의 선진국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인-사회-국가의 발전은 독립된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속의 국가, 국가 속의 사회, 사회 속의 개인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사회에 대한 논의는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가 모두 고려되는 포괄적 특성을 지닌다. 과거에 국가의 지향점이 부국강병이었다면 오늘날 선진국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관용하고 소통하며 국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를 통합사회에 적용해 보면,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사회갈등을 극복

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건설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 민주적 권리, 안전을 보장받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개인이 되어야 타인에 관용적이고 사회를 신뢰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를 지닌 국가야말로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국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역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발전관점에 더하여, 통합사회가 갈등사회의 대안적 모습이라는 차원에서도 개인, 공동체, 국제사회의 다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갈등은 국내적 상황 또는 경제적 여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갈등은 그 자체로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게 된다. 개인의 갈등, 사회의 갈등, 국가적 갈등, 세계적 갈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일상화된 갈등, 제도화된 갈등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부터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악순환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통합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데 그 논리는 ‘개인-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갈망과 제도적 반응은 16~17세기 근대적 의미의 국가주의 발현, 18세기 프랑스 혁명, 19세기 후반 혁명적 국가주의의 등장과 그 한계를 겪으며 확산되었다. 비인격적인 국가에 부여되던 정체성이 인격체인 개인으로 이동한 것이다. 역사적 투쟁 속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소수의 폭압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였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담론은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평등으로 전이되었다. 과거의 국가가 정치와 조세라는 공권력으로 개인을 국가에 흡수시키는 강압적 존재였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경제성장 이후 지나친 개인주의, 탈사회화, 탈국가화 현상 등 원자화된 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공동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동체는 매우 신축적 개념으로서 작게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에서부터 크게는 지구촌 전체로도 확장가능하다.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 정서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기능적 효과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이종수, 2008; 최종렬, 2004). 또한 인간성의 고양, 사회통합의 메시지, 삶의 질적 개선을 담기 때문에 국가 및 사회발전으로도 연계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발현되고 유지된다(Putnam, 1993).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이 아니라 개인 간 관계에 귀속되는 자본 즉 사회적 자본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집단 내의 의무, 규범, 제재, 긍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하며(Coleman, 1988), 사회통합의 새로운 가치다. 사회적 자본의 구축 수준은 다원적 사회의 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발전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장용석 외, 2009).

개인의 정체성, 공동체 건설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 빠른 세계화 과정을 거치며 세계사회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와 13세기 유럽에서 세계시민 혹은 세계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존재한 이래(김상준, 2007), 칸트에 의하면 세계시민사회는 공공성의 발현이며 기존의 공동체주의를 넘어서 초국가적 관점으로서의 확장, 개인 수준에서 가장 이타적인 정체성의 실현으로 여겨진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경험하며 빠른 속도로 세계화 과정에 편입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공성 구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empowered actorhood)가 부여되었다(Meyer et al., 1997).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빈곤, 인권,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기여와 참여가 한 국가의 위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사회에의 기여는 협력과 신뢰의 증진을 통한 세계 평화 구축과 세계 공통의 사회 문제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2. 통합사회 지수의 구성 체계

본 연구의 ‘통합사회’ 지수는 앞서 제시한 개념과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를 대분류로 두고 각각에 중분류와 소분류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분류 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분류 하위에는 각각 2개의 중분류를 두었다. 개념의 적정성, 측정의 대표성, 자료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분류에는 1~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통합사회 지수의 구성 체계는 <표 8>과 같다.

우선 대분류 영역인 ‘개인 보호’ 지수는 ‘자유와 민주’, ‘안전과 보호’라는 2개의 중분류 지수로 구성된다. 중분류 중 하나인 ‘자유와 민주’는 사회 속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 3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개인 보호’의 또 다른 중분류인 ‘안전과 보호’는 경제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이 통합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안전, 사회적 보호, 사

<표 8> ‘통합사회’ 지수의 구성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세부 내용
개인 보호	자유와 민주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Index of Economic Freedom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of the Press
	안전과 보호	경제적 안전 사회적 보호 사회 보장	실업률 범죄율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공동체 건설	다양성과 관용	양성평등 장애인 배려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비율	성격차지수 장애인관련 법률수 세계가치관조사 관용지수 WDI(World Bank) 자료
	신뢰와 참여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정도	세계가치관조사 일반인 신뢰문항 세계가치관조사 기관신뢰 문항 세계가치관조사 단체참여 문항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 참여	국제정부기구 참여	가입되어 있는 국제정부기구 수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평화유지활동	GNI대비 ODA 공여액 평화유지활동 기여(물적/인적)

회 보장 등 3개의 소분류를 측정하였다.

대분류 ‘공동체 건설’ 지수는 ‘다양성과 관용’과 ‘신뢰와 참여’라는 2개의 중분류지수로 구성된다. 중분류 중 하나인 ‘다양성과 관용’은 다원적 사회에서의 공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영하고 개방적 사회가 곧 통합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장애인 배려,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비율 등 4개의 소분류를 측정하였다. 또한 중분류로서 ‘신뢰와 참여’는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로서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 정도 등 3개의 인지적 지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분류 ‘국제사회 기여’ 지수는 ‘국제사회 참여’와 ‘국제협력’이라는 2개의 중분류 지수로 구성하였다. ‘국제사회 참여’는 국제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활동하는지 보기 위해 한 국가가 몇 개의 국제정부기구에 가입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또 다른 중분류로서 ‘국제협력’은 한 국가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세계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평화유지활동 정도를 포함하였다.

### 3. 데이터 특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2010년 1월 기준 OECD의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1990년에서 2008년까지 19년 동안의 패널통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시간 추세가 있는 통계, 서베이 통계, 지수 형태의 통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계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시간추세가 있는 통계는 외삽법(extrapolation)이나 내삽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으며, 서베이 통계의 경우 누락된 통계를 유효한 가장 최근 관측치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계단함수(step function)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수의 통계 수치가 빠져 있는 경우, 만약 동 지수가 서베이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면 계단함수로 처리하고 서베이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시간추세가 있는 경우는 외삽법이나 내삽법을 이용하여 처



〈표 9〉 ‘통합사회’ 세부지표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특성	출처	결측국가	추정함수
개인 보호	자유와 민주	경제적 자유	Hard & Survey	Heritage Foundation		linear
		정치적 자유	Survey	Freedom House		step
		언론의 자유	Survey	Freedom House		step
	안전과 보호	경제적 안전	Hard	WDI (World Bank)		linear
		사회적 보호	Hard	UNODC	브라질	linear
		사회 보장	Hard	OECD	칠레, 비OECD 국가	linear
공동체 건설	다양성과 관용	양성평등	Hard	WEF		linear
		장애인 배려	Hard	ILO		-
		타인에 대한 관용	Survey	World Values Survey		step
		외국인 비율	Hard	WDI (World Bank)		linear
	신뢰와 참여	일반인에 대한 신뢰	Survey	World Values Survey		step
		기관에 대한 신뢰	Survey			step
사회단체 참여정도		Survey	사우디아라비아		step	
국제 사회 기여	국제사회 참여	국제정부기구 참여	Hard	COW		linear
		국제 협력	공적개발원조	Hard	OECD	
			평화유지활동	Hard	UN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주: 결측국가는 해당 변수의 전 기간 자료가 결측임.

리하였다.

특정 변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체시기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수 및 연관된 지수를 만들거나 순위를 정할 때 동 수치들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지표 관련 데이터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분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지표 체계에 상응하는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특성,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 결측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사회 수준과 발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지표를 표준화한 후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9년간 OECD 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트렌드의 궤적을 그려보는 연구이다. 다음으로 국가군의 차이에 기인한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개별국가들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기 이전에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전 기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전체적 통합사회 지수,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1인당 GDP 각각에 대해 전체 평균과 그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의 통합사회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위상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지수값 그 자체의 현재 및 과거수준, 그 변화율을 비교하는 한편, 지수 순위 변화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사회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Osberg and Sharpe(2005)의 표준화 방법을 원용하였다. Osberg and Sharpe(2005)의 표준화방식은 기본적으로는 HDI의 표준화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ax = global Max + |global Max * 10\%|$ ,  $Min = global Min - |global Min * 10\%|$ 로 하였다.

$$LSM \text{ 표준화 지수} = (Value - Min)/(Max - Min)$$

(여기서,  $Max = global Max + |global Max * 10\%|$ ,  
 $Min = global Min - |global Min * 10\%|$ )

이러한 표준화는 각각의 수치를 [0, 1] 사이로 선형화 시키는 것으로서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일국 내 변화율도 비교 가능토록 한다. LSM 지수는 표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균 수렴 현상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지수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움직임의 나타내는 특정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LSM으로 표준화 한 지수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특정 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LSM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 값과 표준편차로 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 값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LSM 방식에서는 특정

변수의 영향력이 다소 과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의 영향력 정도가 미미하여 순위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단일 지수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는 다른 특별한 대안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균등 배분(equal weight)하였다.

## IV. 통합사회의 세계적 추세 분석

### 1. 영역별 분석

통합사회 수준에 관한 전 세계적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각 영역별 지표를 표준화시켜 평균과 변동계수를 사용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1990년대, 2000년대, 전 기간으로 구분하여 전체적 통합사회 지수,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1인당 GDP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과 그 변화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 그림 1과 같다. 단, 대분류 ‘개인 보호’에 포함된 지표 중 ‘사회보장’은 OECD 통계의 각국 GDP 대비 사회보장 관련 정부 지출 액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료구득가능 국가 수가 OECD 회원국 30개국<sup>3</sup>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통합사회’와 ‘개인 보호’ 영역을 사회보장 지표가 누락된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29개의 국가,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하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36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분석하였다.<sup>4</sup> 이하에서는 후자를 통합사회<sup>2</sup> 지수라고 칭한다.

3. 2010년 1월 기준 OECD 31개 회원국 중 칠레 제외, OECD 비회원국인 8개 국가 제외.

4. 특정 변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체시기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수 및 연관된 지수를 만들거나 순위를 정할 때 동 수치들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지표 관련 데이터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분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표 11>에 의해 ‘통합사회’ 지수에서는 non-OECD회원국과 브라질이 제외되어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통합사회<sup>2</sup>’ 지수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외되어 분석대상이 36개국이 되었다.

‘통합사회’ 지수에 ‘사회보장’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것은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먼저, ‘사회보장’ 지표를 포함시킨 ‘통합사회’ 지수는 각국의 사회통합 상태의 일면을 더욱 고려할 수 있어 종합적인 측정지표로서의 의의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한 ‘통합사회’ 지수에는 더욱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통합사회’ 위상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가 구축된 30개국은 경제 선진국들의 모인 OECD 회원국이므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소위 선진국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제외할 경우에는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후발산업국가들의 사회통합 수준까지 분석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보호’ 지수의 평균값과 변화율, 순위에 ‘사회보장’ 지표를 포함시킨 것과 제외한 것을 모두 표시하여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한편, 통합사회 지수의 연도별 평균을 전 세계 국가 및 지표산정대상 39개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평균의 시계열 추이와 비교했다. Maddison(2010)의 데이터에서 구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자료를 LSM으로 변환한 후 표준화 변수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였다.

〈표 10〉과 그림 1을 살펴본 결과, 첫째,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경제 성장 발전 속도에 여전히 뒤쳐지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 발전 속도의 둔화에 비해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대비 2008년의 1인당 GDP 지수는 0.22에서 0.32로 약 46% 증가한 반면, 통합사회 지수는 0.44에서 0.50으로 약 13% 증가에 그치고 있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1인당 GDP 연평균 변화율은 2.16%에서 2.11%로 증가속도의 둔화를 보였으나 통합사회 지수는 0.45%에서 0.93%로 나타나 2000년대에 이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통합사회 지수 3개 영역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개인 보호 > 공동체 건설 > 국제사회 기여’의 순서, 상대적 증가속도를 비교하면 ‘국제사회 기여 > 공동체 건설 > 개인 보호’ 순서로 나타난다. 1990년~2008년간 연평균 변화율의 경우 ‘국제사회 기여’는 1.68%, ‘공동체 건설’은 0.88%, ‘개인 보호’는 0.29%를 보였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연평균 변화율은 ‘국제사회 기여’가 0.96%p, ‘공동체 건설’이 0.67%p, ‘개인 보호’ 영역이 0.25%p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이미

〈표 10〉 전체평균 및 변화율 추이

	평균값			연평균변화율 (%)		
	1990	2000	2008	90-00	00-08	90-08
통합사회 (통합사회2)	0.44 (0.44)	0.46 (0.46)	0.50 (0.50)	0.45 (0.39)	0.93 (0.93)	0.66 (0.63)
개인 보호 (개인 보호2)	0.72 (0.76)	0.73 (0.76)	0.76 (0.78)	0.18 (-0.01)	0.43 (0.28)	0.29 (0.12)
공동체 건설	0.30	0.32	0.35	0.58	1.25	0.88
국제사회 기여	0.26	0.29	0.35	1.25	2.21	1.68
1인당 GDP(지수)	0.22	0.27	0.32	2.16	2.11	2.13
1인당 GDP(\$)	18,574	22,755	26,706	2.05	2.02	2.04

주: ( ) 안은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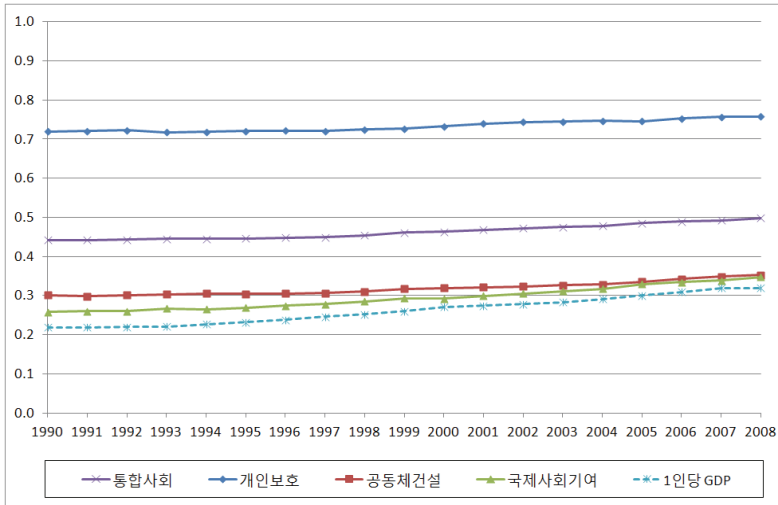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평균의 추이

‘개인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지수의 평균 값은 가장 높지만 최근의 발전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는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에 확산되고 있어 평균 값은 가장 낮으나 그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국내적 차원의 화합을 넘어 한 국가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빠르게 확산됨과 동시에 한 시대의 지배적

관점이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공동체주의 그리고 세계사회로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 2. 변동계수 분석

통합사회 발전의 국가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기 위해 각 연도별로 국가별 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sup>5</sup>를 계산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계수 값의 감소한다는 것은 해당 지수에 대한 국가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계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1인당 GDP의 변동계수는 0.53~0.57의 값을 보여 동 기간 국가 간 격차가 거의 축소되지 않은 반면, 통합사회 지수의 변동계수는 0.12~0.17의 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격차 축소 현상을 보였다. 둘째, 다른 지수에 비해 국제사회 기여 영역의 국가 간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0년에 비해 2008년의 국제사회 기여 영역의 변동계수는 0.55에서 0.26으로 감소한 반면, 다른 지수들의 변동계수는 0.03에서 0.01로의 작은 변화를 보였다. 경제적 성장에 있어 국가 간 격차는 그 자체로서 격차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격차의 감소양상이 2004년 이후부터 매우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 기여 영역의 국가 간 격차 감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답보 상태에서도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점차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사회 중에서도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관심, 노력, 사회적 합의가 증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변동계수는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분산 및 표준편차처럼 표본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그러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뉘므로 변수의 산포도가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omit free) 상대적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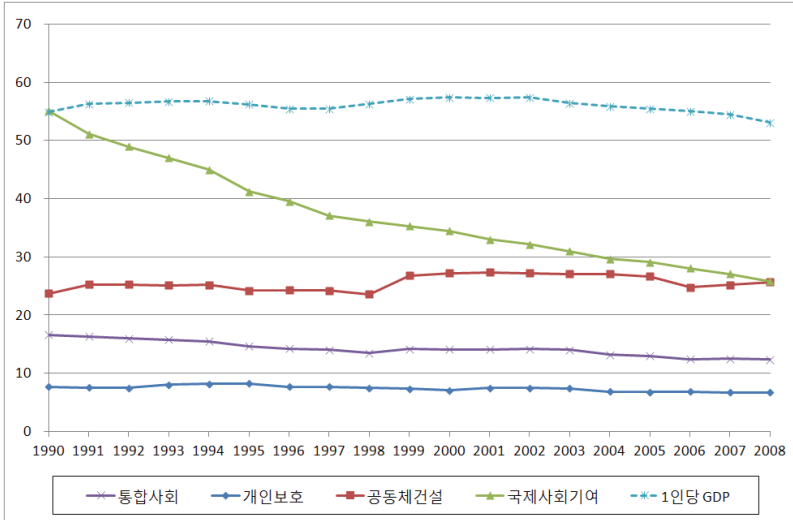


그림 2. 변동계수 추이

### 3.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 간 비교

분석 대상인 39개국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대분류 기준인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영역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OECD 회원국인 31개 국가와 비회원국인 8개 국가로 국가군을 구분하여 두 비교군 간의 평균, 시계열 변화, 국가군 간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sup>6</sup>

그 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이 경제 및 통합사회발전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부터 그림 7을 보면 OECD 회원국이 전 시기에 걸쳐 더 높은 평균값을 지닌다. 둘째, 경제적 발전 속도는 OECD 회원국이 더 빠르지만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non-OECD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을 보면 OECD 회원국의 GDP 지수는 1990년 대비 2008년에 약 46% 증가하였으나 비회원국은 약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 OECD 비회원국의 경우 사회보장 지표의 데이터가 미비하여 ‘통합사회’, ‘개인 보호’ 분석은 생략하고 ‘통합사회2’, ‘개인 보호2’로 대신하였다.

〈표 11〉 OECD와 non-OECD의 지수 수준 및 변화율

		OECD	non-OECD
GDP 지수	1990년	0.255	0.079
	2008년	0.373	0.113
	변화율(%)	46.275	43.038
통합사회 지수	1990년	-	-
	2008년	-	-
	변화율(%)	-	-
통합사회2 지수	1990년	0.459	0.364
	2008년	0.511	0.422
	변화율(%)	11.329	15.934

주: OECD와 non-OECD로 구분하였으므로 OECD로부터 구득한 ‘사회보장’ 지표가 포함된 ‘통합사회’ 지수에서는 두 국가군 간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함.

〈표 12〉 OECD와 non-OECD의 지수별 격차 변화

	OECD와 non-OECD의		
	GDP 지수 격차	통합사회 지수 격차	통합사회2 지수 격차
1990년	0.1758	-	0.0954
2008년	0.2596	-	0.0887
격차 증가(배)	1.48	-	0.93
변화율(%)	47.68	-	-7.06

한 ‘통합사회2’ 지수의 발전 속도는 비회원국이 1990년 대비 2008년에 약 16%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은 1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 12〉, 그림 3, 그림 4와 같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통합사회 발전 수준 격차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군 간에 GDP 지수의 격차는 19년 동안 1.48배 증가하였으나 ‘통합사회2’ 지수의 격차는 0.93배 감소하였다.

넷째, 대분류 영역별로 전 기간 동안에 나타난 국가 간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한 ‘개인 보호’ 지수는 전반적으로 격차가 크고 ‘공동체 건설’ 지수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국제사회 기여’ 지수는 최근 들어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특히, ‘국제사회 기여’ 지수는 OECD 회원국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7.8%(0.145 → 0.286) 증가한 반면 비회원국의 경우 14.1%(0.284 → 0.362)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서 2008년 간 연평균 변화율 역시 OECD 회원국은 0.43%이지만 비회원국은 0.78%를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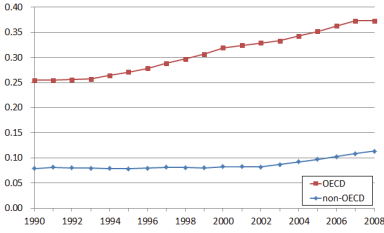


그림 3. 1인당 GDP 지수 OECD와 non-OECD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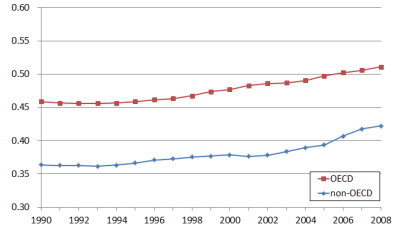


그림 4. 통합사회2 지수 OECD와 non-OECD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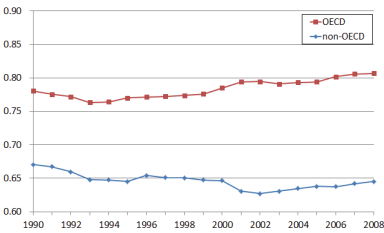


그림 5. 개인 보호2 지수의 OECD와 non-OECD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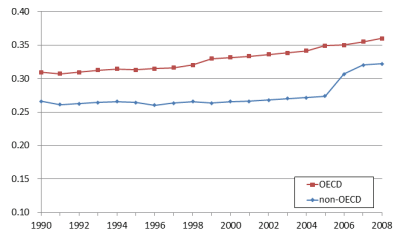


그림 6. 공동체 건설 지수의 OECD와 non-OECD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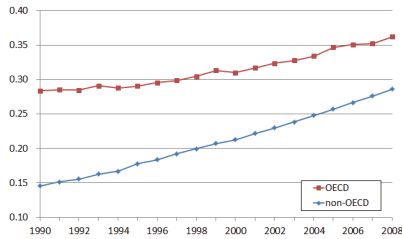


그림 7. 국제사회 기여 지수 OECD와 non-OECD 평균 비교

다. 이는 OECD 비회원국들이 세계사회에 통합되고자 국제정부기구 참여, 평화유지활동 등의 국제협력에 기울이는 노력을 반영하며 이는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V. 한국의 사례

### 1. 한국의 통합사회 지수 평균 및 변화율 분석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을 지수값 그 자체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아래 <표 14>의 지수별 전 기간 평균값을 보면 통합사회 지수와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등의 대분류 지수, 1인당 GDP 모두 한국이 비교대상국가 전체 평균에 훨씬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다음으로 연평균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지수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변화율의 절대값도 커졌다. 그러나 전 기간 연평균변화율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은 지난 19년간 다른 비교 대상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물론 비교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30개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개선 속도는 0.69로 비교대상국가 전체 평균 0.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속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어느 정도의 통합사회 수준을 달성한 선진국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한국의 사회발전이 다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비(非)OECD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개인 보호2’ 지수에서 한국의 전 기간 연평균변화율(-0.12)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과 그 상위 지수인 ‘통합사회2’의 경우에도 한국(0.46)이 다른 국가들(0.63)에 비해 낮은 속도로 변화한 사실을 들 수 있다.

7. 다만,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한 ‘개인 보호2’ 지수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한국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은 OECD 비회원국들이 분석에 포함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호2’ 지표로 계산된 ‘통합사회2’ 지수는 여전히 한국의 평균값이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 지표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개인 보호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 기간에 걸친 한국의 평균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 한국의 통합사회 지수 및 연평균 변화율

		평균값		연평균변화율(%)	
		전체	한국	전체	한국
통합사회	1990년대	0.45	0.37	0.45	0.39
	2000년대	0.48	0.39	0.93	1.06
	전 기간	0.46	0.38	0.66	0.69
통합사회2	1990년대	0.45	0.42	0.39	0.21
	2000년대	0.48	0.43	0.93	0.77
	전 기간	0.46	0.42	0.63	0.46
개인 보호	1990년대	0.72	0.68	0.18	-0.11
	2000년대	0.75	0.68	0.43	0.46
	전 기간	0.73	0.68	0.29	0.14
개인 보호2	1990년대	0.75	0.82	-0.01	-0.29
	2000년대	0.77	0.81	0.28	0.09
	전 기간	0.76	0.82	0.12	-0.12
공동체건설	1990년대	0.31	0.27	0.58	-0.20
	2000년대	0.33	0.27	1.25	0.68
	전 기간	0.32	0.27	0.88	0.19
국제사회 기여	1990년대	0.27	0.16	1.25	3.59
	2000년대	0.32	0.22	2.21	3.49
	전 기간	0.29	0.18	1.68	3.55
1인당 GDP	1990년대	0.23	0.17	2.16	5.49
	2000년대	0.29	0.26	2.11	4.12
	전 기간	0.26	0.21	2.13	4.88

주: 통합사회2, 개인 보호2는 소분류 사회보장 항목을 제외한 지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른 대분류 지수들과는 달리 ‘국제사회기여’의 연평균변화율에 있어 한국의 수치(3.55)가 전 기간에 걸쳐 다른 비교대상 국가들(1.68)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기여가 많이 개선된 것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국의 대외원조가 증가하고, UN 가입과 대외적인 활동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평균값(0.18)이 다른 국가들(0.29)에 비해 아직도 낮은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장 추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책임 있는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제사회기여 정도를 점차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동체 부문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거의 정체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왜 한국이 단기간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통합사회 지수가 낮은 수준에 담보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한국이 지향하는 통합사회의 이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면 공동체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 보호의 경우 ‘사회보장’ 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대상포함 국가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 지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 간의 비교라 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지수에서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그 수치는 낮으나 빠른 속도로 변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 보호2’ 지수에서는 개발도상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수치는 높지만 변화율이 낮다.

한국 통합사회 지표의 평균값 및 변화율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합사회 지수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요소인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부문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택한다면 한국의 통합사회 달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많은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변화율을 분석의 준거로 삼더라도 국제사회기여를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직 미진하므로 이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성장 노력과 통합사회 건설 노력의 정도가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 해야 한다. 한국 1인당 GDP 변화율의 전체 평균값(4.88)에 비해 통합사회 지수의 전기간 연평균 변화율(통합사회 0.69, 통합사회2 0.77)이 현저히 낮으며 비교대상 전체 39개국의 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 동안 한국의 발전전략 구상이 상당부분 경제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통합과 내부적인 균형 및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사회를 위한 준비는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으므로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현 시점에서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문의 조화로운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의 토대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고 공통의 비전을 공유해나감으로써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때 미래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 2. 한국의 통합사회 지수 수준별 순위 현황 및 그룹핑

통합사회 지수의 순위 변화 추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5>는 지수 수준별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5년마다의 순위와 최초연도(1990년)와 최종연도(2008년)에 한국이 속한 순위그룹을 상위 30%(상), 중위 40%(중), 하위 30%(하)로 표시한 것이다.

통합사회 지수로 본 한국의 전반적인 위상은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간의 비교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지수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추가한 ‘통합사회2’ 지수의 경우 1990년도에는 중위에 속하던 한국의 위치가 최종연도인 2008년도에 이르러서는 하위 그룹으로 하락했다. 즉, 통합사회를 향한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사회의 하위 지수들 역시 지난 19년 간 뚜렷한 발전 없이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분류 지수인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 부문은 비교대상 최초연도(1990년)와 최종연도(2008년) 모두 각각 하위, 중위, 하위 그룹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소분류 ‘개인 보호2’ 지수의 경우 한국이 속한 그룹이 1990년도에는 상위, 2008년도에는 중위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교대상에 개발도상국까지 포함되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상위에서 중위로 하락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중분류 지수들 중 ‘다양성과 관용’, ‘국제사회 참여’는 하위 그룹에, ‘자유와 민주’, ‘신뢰와 참여’는 중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협력’ 지수는 1990년 중위 그룹에서 2008년 하위 그룹으로 하락했다.

중분류 중 ‘안전과 보호’ 영역은 ‘사회보장’ 지표 포함여부에 따라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2’로 나누어 순위를 측정하였는데, 두 지수의 한국 순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원인을 추정해보면, 첫

〈표 15〉 한국의 위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위					상대수준	
			1990	1995	2000	2005	2008	1990	2008
통합사회 (29)			25	25	26	28	28	하	하
통합사회2 (36)			22	22	25	24	28	중	하
개인보호 (30)			24	22	27	28	28	하	하
개인보호2 (38)			5	4	10	12	13	상	중
	자유와민주	(39)	25	24	27	27	26	중	중
		경제적 자유 (39)	7	8	15	21	21	상	중
		정치적 자유 (39)	29	27	29	27	26	하	중
		언론의 자유 (39)	29	29	29	29	29	하	하
	안전과보호 (30)		25	23	27	24	25	하	하
	안전과보호2 (38)		7	6	11	7	9	상	상
	경제적 안전 (39)		7	1	12	3	4	상	상
	사회적 보호 (38)		14	13	15	17	21	중	중
	사회보장 (30)		30	30	30	30	29	하	하
	공동체건설 (38)			24	24	24	24	27	중
	다양성과관용	(39)	33	35	37	34	35	하	하
		양성평등 (39)	26	31	32	36	36	중	하
		장애인 배려 (39)	27	32	36	37	37	중	하
		타인에 대한 관용 (39)	27	29	32	28	28	중	하
		외국인 비율 (39)	38	37	36	33	28	하	하
	신뢰와참여	(38)	17	15	15	15	17	중	중
		일반인에 대한 신뢰 (39)	21	19	23	24	22	중	중
		기관에 대한 신뢰 (39)	7	6	14	17	18	상	중
		사회단체 참여 정도 (38)	14	14	15	12	18	중	중
		국제사회기여 (37)			30	31	33	34	34
	국제사회참여	국제 정부기구 참여 (39)	29	32	33	34	34	하	하
	국제협력	(37)	23	24	24	28	27	중	하
		공적 개발 원조 (39)	29	22	24	28	27	하	중
		평화유지 활동 (37)	10	12	16	26	14	상	중

주: 1) 상대수준은 대상국가 중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를 나타냄.  
 2) ( ) 안의 숫자는 지표별 대상국가의 수를 나타냄.  
 3) 통합사회2, 개인보호2, 안전과보호2는 소분류 사회보장 항목을 제외한 지수.

째, ‘사회보장’ 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경제적 안전’ 지표가 중분류 ‘안전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보장’이 포함되면 ‘경제적 안전’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한국의 순위가

〈표 16〉 한국의 지표 수준별 순위 변화

1990년	2008년	변화	통합사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위	상위	변화없음			안전과 보호 <sup>2</sup>	경제적 안전
	중위	하락		개인 <sup>2</sup>		경제적 자유, 기관에 대한 신뢰, 평화유지 활동
	하위	하락				
중위	상위	상승				
	중위	변화없음		공동체	자유와 민주, 신뢰와 참여	사회적 보호,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 정도
	하위	하락	통합사회 <sup>2</sup>		국제협력	양성 평등, 장애인 배려, 타인에 대한 관용
하위	상위	상승				
	중위	상승				정치적 자유, 공적 개발 원조
	하위	변화없음	통합사회	개인, 국제사회	안전과 보호, 다양성과 관용, 국제사회 참여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 외국인 비움, 국제정부기구참여

하위권에 랭크되는 ‘사회보장’의 영향력이 커지며 ‘사회보장’ 지표를 제외한 ‘안전과 보호<sup>2</sup>’ 지수의 경우는 ‘경제적 안전’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 한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지표 포함여부는 곧 비교대상국가군의 수 및 그 특성과 직결된다. 선진국과의 비교인 ‘안전과 보호’의 경우 한국이 OECD 내에서 아직은 개인 안전 및 보호 수준이 하위권(2008년 한국 순위 30개국 중 25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 범위를 개발도상국까지로 넓혀 ‘안전과 보호<sup>2</sup>’를 보면 한국의 순위가 전체 38개국 중 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지표를 통합사회 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분석의 어려움이 따르는 하나 한국의 통합사회 구축 현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표 16〉은 〈표 15〉의 내용을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정리한 것이다. 통합사회 소분류 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위상도 상위 수준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중위 또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체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표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특징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하자.

먼저, 실업률로 측정된 ‘경제적 안전’ 지표의 경우 지난 19년간 유일하게 거의 지속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단연 눈에 띈다. 한국은 비슷한 발전 수준을 이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각국의 일자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낮은 실업률에 따른 높은 경제적 안전도를 하나의 측정지표로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위에서 중위로 순위가 상승한 ‘정치적 자유’와 ‘공적개발원조’ 두 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는 하위에서 중위 수준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1990년 29위에서 2008년 26위로 오른 것에 불과해 그 개선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며 2008년 현재 중위 그룹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엄밀히 중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지표도 하위에서 중위 그룹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역시 1990년 29위에서 2008년 27위로 2개 순위 차이밖에 나지 않아 2008년 현재 중위 그룹에 속해있다.

‘외국인 비율’의 경우 지표 순위로 분류한 한국의 위치는 1990년과 2008년 모두 하위에 그치고 있으나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38위에서 2008년 28위로 무려 10계단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정책수단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외국인비율’ 순위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위에서 하위로 하락한 소분류 지표 3개는 중분류 ‘다양성과 관용’에 포함되는 ‘양성평등’, ‘장애인배려’,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한국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 정도를 측정하고자 포함시킨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일제히 순위 하락을 보인 것이 우려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의 통합사회 달성 정도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몇몇 소분류 지표에서 우수한 상태



또는 근소한 개선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지표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고 본다.

##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통합사회의 개념을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로 제시하고 이 통합사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의 수준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이 통합사회지수를 통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31개 회원국과 G20 국가 중 OECD 회원국이 아닌 8개국을 포함해 총 39개국(2010년 1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사회 발전 속도 및 국가 간 격차는 경제성장 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사회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국제사회 기여’ 부문의 빠른 발전 속도와 국가 간 격차의 두드러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간의 비교 분석 결과, 경제발전속도는 OECD가 빠르나 통합사회 발전 속도는 OECD 비회원국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두 국가군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증가하나 통합사회 발전 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회의 세계적 추세 분석을 통해 한국의 통합사회 수준이 39개국 전체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과 통합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균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합사회의 형성은 미래 선진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사회 지표체계는 통합사회 구성요소로서 ‘공동체 건설’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고려하고 통합사회의 범위를 국내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 기여’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에 제시된 사회적 배제라는 부정적 개념을 긍정적 개념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의 사회통합을 세계 사회로의 통합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통합사회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 세계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선진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선진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경제발전 수준과 통합사회 발전 수준의 관계, 한국의 위상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국가발전 정책의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합사회 지수를 분석함에 있어 각 지수의 비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지수의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에 있어 선진국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져 이 또한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투고일자: 2011-10-04    심사일자: 2011-10-31    게재확정: 2011-12-14

## 참고문헌

- 강병서. 2005. 『SPSS를 활용한 다변량 통계학』. 서울: 한경사.
- 김상준. 2007. 「완전한 시민적 정체와 세계시민사회: 칸트에서의 병립, 롤스에서의 단계」, 『경제와 사회』 가을호. pp. 282-366.
- 노대명·이태진·원일. 2009a.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b.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권 3호. pp. 253-277.
- 문진영. 2008. 「사회권의 개념 및 성격」. 2008년 제2회 빈곤포럼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중수(편). 2008. 「공동체와 마을만들기」.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 장용석·박명호·강상인·오완근·이영섭·한상범·박찬열·정명은·박나라. 2010.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통합사회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10-01-0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권 2호. pp. 45-69.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권 6호. pp. 97-132.
- Bardone, L. and D. Stanton. 2003.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dicators in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s Indicators Sub Group.” Paper Presented to 23rd CEIES seminar: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Lisbon.
-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 (BLP).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pp. 227-24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120.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 EFILWC. 2004. *Percep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Exclusion in an enlarged Europe*. EU Commission.
- European Union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Brussels.
- European Union. 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 European Commission. 2006. *Portfolio of Overarching Indicators and Streamlined Social Inclusion, Pensions and Health Portfolio*. Brussels.
- European Union Commission. 2007. *Fourth Report on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Brussels.
- European Communities. 2009.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2008: EU Indicators*.
- Maddison, Angus. 2010. “Statistics on World Population, GDP and Per Capita GDP, 1-2008 AD.” University of Groningen.
- Meyer, J., J. Boli, G. Thomas, and F. Ramirez. 1997.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 pp. 144-181.
- OECD. 2006. *OECD at a Glance*.
- Osberg, L. and A. Sharpe. 2005.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2). pp. 311-336.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Robinson, P. and C., Oppenheim.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London.

세계가치관조사(<http://www.worldvaluessurvey.org>)

세계경제포럼(<http://www.weforum.org>)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유럽연합(<http://ec.europa.eu/social>)COW(<http://www.correlatesofwar.org>)

Freedom House(<http://www.freedomhouse.org>)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

ILO(<http://www.ilo.org>)

OECD(<http://stats.oecd.org>)

UN PKO(<http://www.un.org/en/peacekeeping>)

UNODC(<http://www.unodc.org>)

## The Current State of Social Cohesion: The World and Korea

Yong Suk Jang  
Yonsei University

Myung Ho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ankeun O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ck of social cohesion in a society often leads to higher chances of national crisis and societal unhappiness. Many nations, therefore, become more aware of its importance and put greater efforts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ew index of social cohesion with which we analyzed the global trends and the gaps among countries. To understand the comprehensive features of a nation's social cohesion covering from individual to global aspects, we suggested a social cohesion index composed of three elements — individual protection, community building, and global contribution. We constructed a panel dataset of 39 countries including 31 OECD and 8 additional member countries of G20, over a 19-year period from 1990 to 2008. The gap among countries has narrowed in the index of social cohesion slightly faster than that of economic growth, and the trend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fast decreasing gap among countries in the dimension of global contribution. Compari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non-OECD countries, we also found that the improvement in social cohesion of the non-OECD countries is faster than that of the OECD members. The gap in per capita GDP is still wide bu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between these two groups has narrowed little by little. Finally, we observed that the level of Korea's social cohesion is below the average of 39 countries. Many policy efforts in improving social cohesion are needed to make our astonishing economic miracle “more sustainable.”

Key Words: Social Cohesion, Individual Protection, Community Building,  
Global Contribution, Index, Korea

장용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Tel\_02-2123-2956  
E-mail\_yongsukjang@yonsei.ac.kr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Tel\_02-2173-3150  
E-mail\_mhpark@hufs.ac.kr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Tel\_031-330-4247  
E-mail\_wanoh@hufs.ac.kr